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이남호·황호진, 교육감 후보 단일화 선언

전북교육 향후 방향성 등 둘러싼 중대한 분수령 교육현장 위기감도 강조
학력신장 3.0 시대 개막 등 3대 전략, 핵심 의제로 부상



이남호·황호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자들과 함께 화이팅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을 뒤흔드는 초대형 변수가 터졌다. 이남호·황호진 예비후보가 14일 전격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다자 구도로 전개되던 선거전은 사실상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거 막판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후보 단일화가 현실화되면서 판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회견장 안팎에는 취재진과 선거 관계자들이 몰려들며 이례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까지 교육 철학과 핵심 공약을 놓고 공개적인 공방을 벌여온 두 후보가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술렁였다.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고 카메라 셔터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두 후보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남호 후보의 단일화에 공식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단일화는 단순한 후보 간 연대 차원을 넘어 전북교육의 향후 방향성과 교육 철학을 둘러싼 중대한 분수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선거 판세를 뒤바꿀 결정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두 후보가 이날 전면에 내세운 핵심 메시지는 '학력신장 3.0 시대'다. 공동 선언문에서 두 후보는 "전북교육의 도약 흐름을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는 절박한 속에서 결단했다"며 "그동안의 성과는 계승하고 낡은 관행과 폐단은 과감히 혁신하는 실용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참학력 시대를 1.0, 현재의 학력신장 기조를 2.0으로 본다면 3.0은 AI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형 학력 혁신 모델"이라며 "학생들의 질문하는 힘, 생각하는 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성적 향상에 그치지 않고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형 역량 중심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기존의 기초학력 보장을 넘어 진화 경쟁력과 학교생활기록부 경쟁력, 창의적 사고력까지 포괄하는 보다 확장된 교육 비전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단일화 배경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교육 현장의 위기감을 강조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황호진 후보는 "교육공동체 전반에서 전북교육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컸다"며 "최근 여론의 흐름 속에서 이대로 가면 실패한 과거 교육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전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치는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발표된 전북교육 성공 3대 전략도 선거전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학력신장 3.0 시대 개막이다. 기초학력 보장을 넘어 '초·중·고' 전 단계 진화 경쟁력과 학생부 경쟁력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는 AI 대전환 시대 미래교육 선도다. 독서 기반 사고력 교육과 AI 융합교육을 강화해 창의적 문제 해결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세 번째는 학생 경험복지 강화다. 에듀케어 확대, 해외연수,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넓히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됐다.

이남호 후보는 "이제는 전북을 떠나는 교육이 아니라 전북에서 배우고 전북에서 성장하는 '찾아오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거 구도를 둘러싼 날 선 메시지도 이어졌다. 두 후보는 특정 후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학력 저하와 교원 혼란을 초래했던 교육 흐름으로의 회귀를 강하게 경계했다. 또한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 리더십 검증 필요성도 거듭 강조하며 사실상 상대 진영을 겨냥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이번 단일화가 선거 판세를 뒤흔들며 중대 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다자 구도로 전개되던 선거전이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로 급속히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후 추가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선거 구도는 더욱 빠르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에서는 이번 단일화가 단순한 표 결집을 넘어 '과거 회귀 저지'와 '미래교육 혁신'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선점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단일화는 선거 흐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적 분수령"이라며 "이제 선거는 정책 경쟁을 넘어 교육 철학과 리더십의 정면 승부로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인 결전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가운데, 이번 단일화 선언이 실제 판세 변화로 이어질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 철학, 정책 경쟁력, 도덕성 검증, 추가 연대 여부가 향후 선거전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오상근 기자

재난 사전대피 지원 강화한다

도, 주민에게 지급할 '일시구호세트' 마련
사전대피 단계 즉시 지급... 초기 불편 최소화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대비해 사전대피 주민에게 지급할 '일시구호세트' 5,000세트를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억 원을 투입해 구호세트를 제작하고, 14개 시군 재해구호창고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일시구호세트는 치약·칫솔세트, 비누, 샴푸, 로션 스킨, 수건, 담요, 화장지 등 생활용품 8종으로 구성되며, 총 5,000세트를 시군별로 기본 350세트씩 배부한다. 도는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전진 배치해 대피 시 현장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도는 대한적십자사 전북 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일시구호

세트 제작과 보관 배송 등 전 과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구호용품 지원은 기상예보 및 위기경보 발령, 시군의 사전대피 결정, 주민 대피 이후 현장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재난 발생 시에는 기존 응급구호체계와 연계해 이체된 지원으로 이어진다. 도는 5월까지 물품 제작과 시군 배치를 완료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이전에 운영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또한 적십자 봉사원과 협조를 통해 재난 상황 시 신속한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전 국장은 "사전대피 단계에서의 지원을 통해 재난 대응의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오만호 기자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전

도, 전주시 등과 TF팀 출범·공모 대응체계 가동
산업·주거·문화 집약... 지역 성장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성장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도는 14일 전주시, 용역 수행기관과 함께 키오프 회의를 열고 '전북 도심융합특구(전주) 공모 추진 TF팀'을 공식 출범시키며 특구 유치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도심에 집약해 기업과 인구가 모이는 '도심형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국가사업이다. 교통 여건과 정주 환경, 일자리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국비 지원, 규제 완화, 기업 유치 인센티브 등이 연계돼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공모에 참여해 특구 유치를 추진한다. TF팀은 건설교통국장을 팀장으로 총괄대응반, 사업추진반, 전략수립지원반, 기획·분석반 등 4개 반, 20명 규모로 구성됐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전북연구원, 전주시정연구원, LH 전북본부 등이 참여해 공모 대응부터 사업 구상, 입지 분석,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특히 중앙부처 대응과 공모 전략 수립,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계 산업 발굴 등 특구 지정에 필요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향후 월 1회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일정에 맞춰 공모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특구 후보지 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공모를 접수하고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심융합특구는 산업과 주거, 문화가 결합된 핵심 성장 거점"이라며 "전주시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전북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초광역권 5국 3북' 정책에 대응해 전북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광역시 중심 정책에서 지방 대도시로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지정했으며,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향후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로 확대 지정할 계획

정부, 지역 건설업체와 중동발 위기 대응 모색

국토부, 17일까지 권역별 중앙·지방정부-건설업체 중동상황 대응 간담회 개최

중동 전쟁 여파로 건설 자재 수급 불안과 공사 지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전국 권역별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체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건설업체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건설 현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일부터 '건설현장 비상경계 TF'를 가동해 건설 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해왔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역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난과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오만호 기자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제2회 순창 찰우렁 여행

청정 순창에서 봄나물 향연

2026. 4. 17.(금) ~ 18.(토)
순창읍 경천 일원(순창군청 건너편)

주관 | 순창군산림조합 | 농협 순창군지부 · 순창농협 · 동계농협 · 서순창농협 · 구림농협 · 순정축협 ·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후원 | 순창군